

뇌물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김소영

I. 대상 범죄

1. 뇌물범죄 일반

죄명	적용법조	법정형
수뢰	형법 제129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사전수뢰	형법 제129조 제2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7년 이하 자격정지
제3자 뇌물제공	형법 제130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수뢰후 부정처사	형법 제131조 제1항	1년 이상 징역
부정처사 후 수뢰	형법 제131조 제2항	1년 이상 징역
공무원이었던 자 부정처사 후 수뢰	형법 제131조 제3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알선수뢰	형법 제132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7년 이하 자격정지
뇌물공여	형법 제133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제3자 뇌물교부 제3자 뇌물취득	형법 제133조 제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1억 원 이상 가중뇌물수수	특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가중뇌물수수	특가법 제2조 제1항 제2호	7년 이상 징역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가중뇌물수수	특가법 제2조 제1항 제3호	5년 이상 징역

2. 수재죄 등

-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수뢰자의 신분적 요소와 무관하게 성립되는 범죄로서 오히려 변호사법위반죄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므로 뇌물죄의 기준 설정 대상에서 제외함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특가법 제3조)

☞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사무에 관하여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이익을 수수 또는 약속 등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배임수재(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증재(제2항)의 죄도 행위주체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아니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경우 성립되고, 공무가 아닌 일반적인 사무처리의 공정성을 보호 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 뇌물죄와 구별되므로 뇌물죄의 기준 설정 대상에서 제외함

- 특경법상 수재(제5조), 증재(제6조) 및 알선수재(제7조)의 죄도 형법상 뇌물죄 규정의 적용범위를 금융기관 임직원으로까지 사실상 확대하는 의미가 있기는 하나, 본래의 뇌물죄와는 신분적 요소에 있어 구별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양형자료조사의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뇌물죄의 기준 설정 대상에서 제외함

☞ 양형위원회에서 실시한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 당시 특가법위반(알선수재), 특경가법위반(수재, 증재, 알선수재)의 죄는 배임유형으로 분류되었음

3. 양형기준 설정 범위

가. 고려 사항

○ 통계적 뒷받침

- 뇌물죄는 대표적으로 규범적 접근방식이 강조되는 범죄유형에 해당됨. 다만, 규범적 접근방식으로만 일관할 경우 그 규범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과거 양형실무에 대한 실증적 분석 역시 필요함

○ 범죄의 전형성

-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바(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등), 이와 같은 본래의 보호법익에 부합하는 전형적인 범죄를 위주로 양형기준을 우선 설정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고,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특수한 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의 설정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음

나. 관련 통계

- 지난 4년 동안 뇌물범죄의 죄명별 빈도 수(경합범으로 기소된 경우를 포함)는 아래와 같음

출처 :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실

순 번	죄 명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합 계	평 균
1	뇌물수수	196	139	170	160	665	166.25
2	뇌물요구		2		0	2	0.5
3	사전뇌물수수		2	4		6	1.5
4	제3자뇌물수수	2	1	4	3	10	2.5
5	수뢰후부정처사	21	14	9	16	60	15
6	부정처사후수뢰	14	21	6	19	60	15
7	알선뇌물수수	10	3	6	12	31	7.75
8	뇌물공여	273	232	183	224	912	228
9	뇌물공여교사	2				2	0.5

10	뇌물공여방조				2	2	0.5
11	뇌물공여약속	2	3	0	4	9	2.25
12	뇌물공여의사표시	25	26	6	14	71	17.75
13	제3자뇌물교부	31	14	36	29	110	27.5
14	제3자뇌물취득	21	19	38	21	99	24.75
15	특가법위반(뇌물)	222	165	111	111	609	152.25
합계		819	641	573	615	2,648	662

다. 의견

○ 알선수뢰죄

- 전형적인 뇌물수수 및 공여 범죄와 행위의 특성 면에서 구별되고, 특가법 제3조와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가 제정되면서 실제 사건에서의 적용 빈도수도 급격히 감소하였음
- 사건 수가 너무 적어서 개별 범죄의 특성(형량 범위, 양형인자 및 그 영향의 정도)을 충분히 반영한 적합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제3자 뇌물수수 및 교부, 취득의 죄

- 양형자료조사 대상에 별도의 개별범죄로 포함되지 않아 경험적 접근방식에 의한 형량범위 설정 또는 양형인자 추출에 어려움이 많음
- 필요한 경우 향후 양형자료조사를 거쳐 양형기준을 추가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제1차 뇌물범죄 양형기준의 대상 범죄는 알선수뢰, 제3자 뇌물수수, 교부 및 취득을 제외한 나머지 뇌물범죄로 한정함

- 위 범죄를 대상으로 양형기준을 우선 설정하더라도 전체 뇌물범죄의 90.55%(2,648 중 2,398건)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는 결과가 됨
- 나아가 전형적인 뇌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특수하고 예외적인 뇌물범죄 또는 유사 범죄를 처리하는 데에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II. 범죄유형 분류

1. 범죄유형 분류의 필요성

- 뇌물범죄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의 경우 아래와 같이 입법자가 다양한 법정형으로 세분화된 형법 및 특별법상의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음

[뇌물수수]

죄명	적용법조	법정형
수뢰	형법 제129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사전수뢰	형법 제129조 제2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7년 이하 자격정지
수뢰후 부정처사	형법 제131조 제1항	1년 이상 징역
부정처사 후 수뢰	형법 제131조 제2항	1년 이상 징역
공무원이었던 자 부정처사 후 수뢰	형법 제131조 제3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1억 원 이상 가중뇌물수수	특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가중뇌물수수	특가법 제2조 제1항 제2호	7년 이상 징역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가중뇌물수수	특가법 제2조 제1항 제3호	5년 이상 징역

☞ 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가중 뇌물수수

- 5천만 원 이상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5년 이상 징역

[뇌물공여]

죄명	적용법조	법정형
뇌물공여	형법 제133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뇌물범죄의 보호법익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일관된 원칙에 따른 유형 분류를 통해 처단형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비교법적 검토

가. 미국

(1) 연방

뇌물수수액 기준	형량범위 ¹⁾	비고 (우리나라, 법정형)
\$ 5,000 이하	1년 3월 - 1년 9월	5년 이하
\$ 5,000 초과 \$ 10,000 미만	1년 9월 - 2년 3월	
\$ 10,000 이상 \$ 30,000 미만	2년 3월 - 2년 9월	
\$ 30,000 이상 \$ 70,000 미만	2년 9월 - 3년 5월	5년 이상
\$ 70,000 이상 \$ 120,000 미만	3년 5월 - 4년 3월	7년 이상
\$ 120,000 이상 \$ 200,000 미만	4년 3월 - 5년 3월	10년 이상, 무기
\$ 200,000 이상 \$ 400,000 미만	5년 3월 - 6년 6월	
\$ 400,000 이상 \$ 1,000,000 미만	6년 6월 - 8년 1월	
\$ 1,000,000 이상 \$ 2,500,000 미만	8년 1월 - 10년 1월	

1)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범죄전력이 1등급인 경우를 전제로 한 것임

○ 공무원 관련범죄의 장에서 뇌물 수뢰와 공여를 함께 규정

USSG 2C1.1 뇌물 제시, 제공, 요구 및 수뢰; 공무원자 강탈

▶ 기본 범죄등급

- 피고인이 공무원인 경우 : 14등급 (1년3월 - 1년9월)
- 피고인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 12등급 (10월 - 1년4월)

▶ 범죄정황에 따른 가중 규정

- 범행에 2회 이상의 뇌물 및 강탈이 있었을 경우 : +2등급
- 뇌물액, 뇌물에 대한 대가, 공무에 대한 피해 3가지 중 최고 금액이 5,000불을 넘을 경우 : 2B1.1의 피해액 관련 가중규정을 적용하여 가중
- 범행이 선거직 공무원이나 정책 결정 또는 기밀을 다루는 고위 공무원과 연관되어 있을 경우 : +4등급

(이 경우 등급 누계가 18 이하인 경우에는 18로 조정)

(2) 기타 각 주²⁾

- 캘리포니아주 : 수뢰죄의 법정형은 2년, 3년, 4년
- 애리조나주 : 뇌물죄는 4등급 중죄로서 징역 2년 6월이 기준형이 되고, 실제 선고례는 최저형이 징역 1년, 최고형이 징역 3년 9월이라고 함

나. 영국³⁾

○ 구성요건

▶ 수뢰죄

2) 문형배, 뇌물 등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양형의 적정화 방안, 재판실무자료(양형실무위원회) 2003(하), p.17

3) 이회기, 영국과 우리나라의 범죄구성요건, 법정형, 선고형 비교분석, 외국의 양형제도 연구, 법원행정처(2003), pp.527-530

-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사건이나 거래 등과 관련하여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는 대가로 혹은 공무원이라는 지위에 기하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금품·이익 등을 달라고 요구, 수수 또는 약속한 경우⁴⁾

▶ 증뢰죄

-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사건이나 거래 등과 관련하여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는 대가로 혹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금품·이익 등을 교부, 약속 또는 제공한 경우⁵⁾

○ 법정형

- 약식 또는 기소형 범죄
- 정식 기소되면 7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병과 가능), 약식 기소되면 6월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병과 가능)⁶⁾

○ 선고사례

-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이 수사대상에 있는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50,000파운드(약 8,500만 원)를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4번에 걸쳐 18,500파운드(약 3,000만 원)을 수뢰한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11년 선고(1997년)
- 공공물품 구매 담당공무원이 물품을 조달하는 기업으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500파운드(500만 원)를 받은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18개월 선고(1982년)
- 주거침입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풀어달라며 2,000파운드(400만 원)를 주려고 한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15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9월을 선고(1980년)

4) Public Bodies Corrupt Practices Act 1889, s.1(1)

5) 같은 조 (2)항

6) PBCPA1889, s.2

다. 독일

○ 수뢰죄(Vorteilsannahme)

- 공무원 혹은 공무상의 특별한 의무를 지는 자가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직무수행에 대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받거나 또는 수수한 경우

⇒ 3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⁷⁾

○ 부정처사 수뢰죄(Bestechlichkeit)

- 공무원 또는 공무상의 특별한 의무를 지는 자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직무행위를 행하거나 장래 행할 것에 대한 대가로서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 또는 수수한 경우

⇒ 6월 이상 5년 이하 자유형⁸⁾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 뇌물 공여(Vorteilsgewährung)

- 공무원 혹은 공무상 특별한 의무를 지는 자 또는 연방군 군인에 대하여 공무원 등 또는 제3자를 위한 이익을 제안, 약속 또는 공여한 경우

⇒ 3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⁹⁾

○ 부정처사를 위한 뇌물공여(Bestechung)

- 공무원 또는 공무상의 특별한 의무를 지는 자 또는 연방군 군인에 대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직무행위를 행하거나 장래 행할 것에 대한 대가로서 공무원 등 또는 제3자를 위한 이익을 제안, 약속 또는 공여한 경우

7) 독일 형법 제331조 제1항. 다만 동조 제3항에서 행위자가 스스로 요구하지 아니한 이익을 약속받거나 또는 수수한 경우, 관할관청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익의 수수를 사전에 승인했거나 또는 행위자가 지체 없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그 수수를 허가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8) 독일 형법 제332조 제1항

9) 독일 형법 제333조 제1항

⇒ 3월 이상 5년 이하 자유형¹⁰⁾

(중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

- 행위자가 장래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이익을 제안하거나, 약속하거나 또는 공여한 경우 타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1(직무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의무의 위반, 직무행위가 그 재량에 속하는 경우, 이익에 영향을 받은 재량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태도를 결의하도록 시도한 경우

⇒ 3월 이상 5년 이하 자유형¹¹⁾

○ 특별히 중한 부정처사 수뢰 및 증뢰

(Besonders schwere Fälle der Bestechlichkeit und Bestechung)

- 행위가 대규모의 이익과 관련된 경우, 행위자가 장래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이익을 계속적으로 수수한 경우, 행위자가 영업적으로 또는 그러한 행위의 계속적 범행을 위해서 조직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히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

⇒ 1년 이상 10년 이하 자유형¹²⁾

라. 프랑스

○ 수뢰죄

- 공무원 등 공공사무취급자 또는 선거에 의해 위임을 받은 자가 법적 근거 없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 10년 이하 구금형, 15만 유로 이하 벌금형¹³⁾

○ 증뢰죄

- 공무원 등 공공사무취급자 또는 선거에 의해 위임을 받은 자에게

10) 독일 형법 제334조 제1항

11) 독일 형법 제334조 제3항

12) 독일 형법 제335조 제1항, 제2항

13) 프랑스 형법 제432-11조

법적 근거 없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10년 이하 구금형, 15만 유로 이하 벌금형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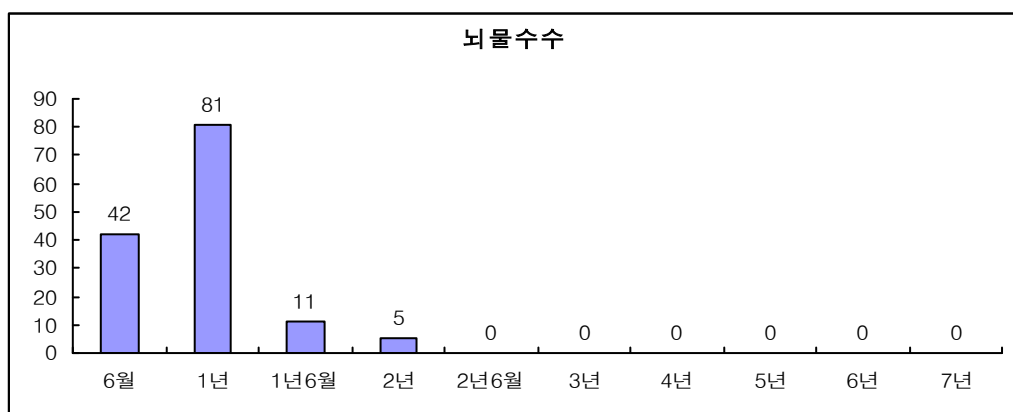
3. 범죄유형화의 시도

가. 선고형 분포

(1) 뇌물수수¹⁵⁾

구분		확정 종국내역		전체	징역형량									
		실형	집행유예		6월	1년	1년6월	2년	2년6월	3년	4년	5년	6년	7년
뇌물수수	피고인수	31	108	139	42	81	11	5	0	0	0	0	0	0
	비율(%)	22.3	77.7	100.0	30.2	58.3	7.9	3.6	0.0	0.0	0.0	0.0	0.0	0.0
수뢰후부 정처사	피고인수	5	20	25	6	15	2	1	1	0	0	0	0	0
	비율(%)	20.0	80.0	100.0	24.0	60.0	8.0	4.0	4.0	0.0	0.0	0.0	0.0	0.0
특가법 (뇌물)	피고인수	31	8	39	0	0	0	1	18	2	5	8	2	3
	비율(%)	79.5	20.5	100.0	0.0	0.0	0.0	2.6	46.2	5.1	12.8	20.5	5.1	7.7
전체	피고인수	67	136	203	48	96	13	7	19	2	5	8	2	3
	비율(%)	33.0	67.0	100.0	23.6	47.3	6.4	3.4	9.4	1.0	2.5	3.9	1.0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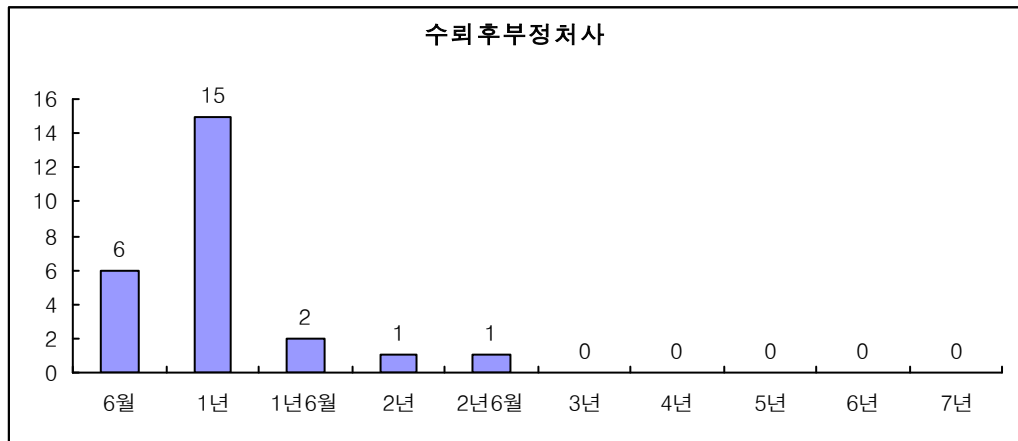
(가) 뇌물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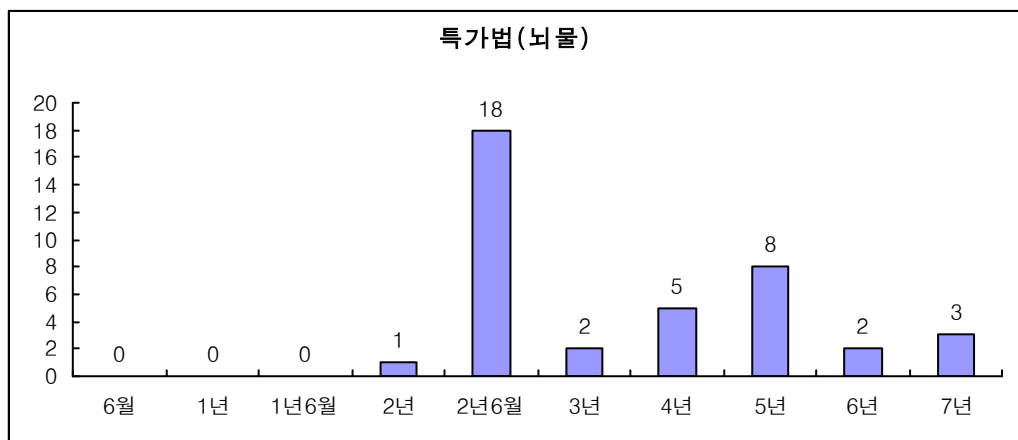
14) 프랑스 형법 제433-1조

15) 분석대상 : 확정사건 및 추가 양형자료조사 결과 중 단일범(실형 및 집행유예 본형 포함)

(나) 수뢰 후 부정처사



(다) 특가법(뇌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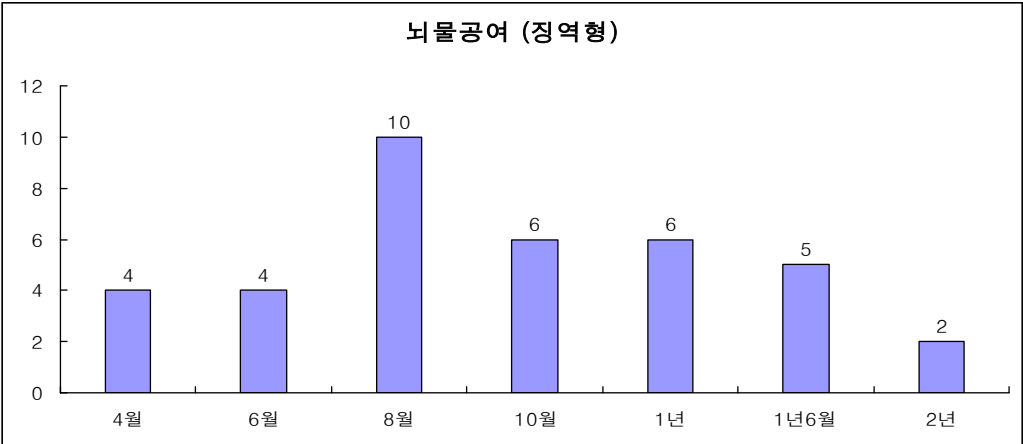


(2) 뇌물공여¹⁶⁾

(가) 징역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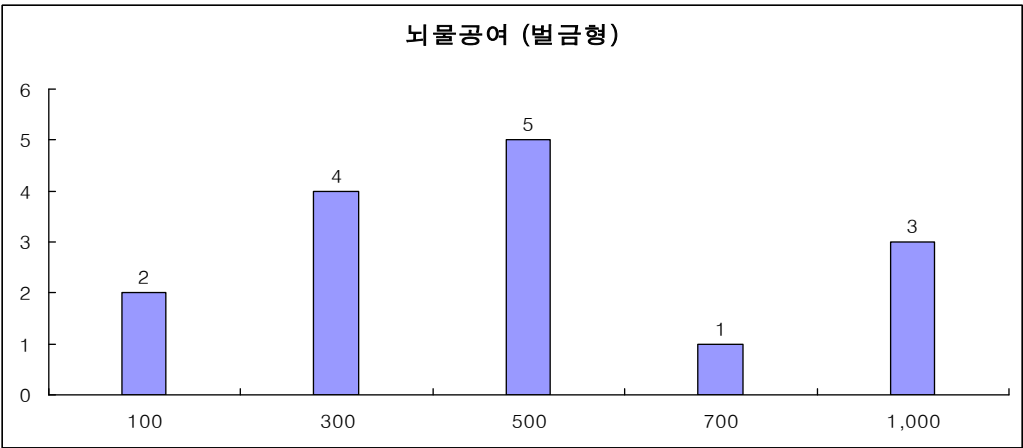
구분		확정 종국내역			전체	징역형량						
		실형	집행유예	벌금		4월	6월	8월	10월	1년	1년6월	2년
뇌물공여	피고인수	9	28	15	52	4	4	10	6	6	5	2
	비율(%)	17.3	53.8	28.8	100.0	10.8	10.8	27.0	16.2	16.2	13.5	5.4
전체	피고인수	9	28	15	52	4	4	10	6	6	5	2
	비율(%)	17.3	53.8	28.8	100.0	10.8	10.8	27.0	16.2	16.2	13.5	5.4

16) 분석대상 :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 결과 중 단일범 및 경합범(전체 조사건수 고려)
징역형 형량분석 시 실형 및 집행유예의 본형 포함



(나) 벌금형

구분		벌금액 (만 원)				
		100	300	500	700	1,000
뇌물공여	피고인수	2	4	5	1	3
	비율(%)	13.3	26.7	33.3	6.7	20.0
전체	피고인수	2	4	5	1	3
	비율(%)	13.3	26.7	33.3	6.7	20.0



나. 뇌물공여의 별도 기준 설정 여부

-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으나, 반드시 뇌물을 교부받는 측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뇌물공여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님
- 뇌물공여를 제외한 뇌물수수에 대하여만 뇌물액수에 따른 특별

법상의 가중처벌이 적용되므로 두 죄의 법정형 체계 및 형량범위의 차이가 큼

- 뇌물공여는 뇌물수수와 달리 범행주체에 있어 별다른 제약이 없고, 선고 시 고려할 양형인자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음
- 따라서,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의 양형기준은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다. 뇌물수수 내에서의 유형 구분

(1) 특가법위반(뇌물)

-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는 형법상의 단순수뢰죄에 대해 뇌물금액에 따라 형벌을 가중하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음
- 두 죄는 선고형의 분포에 있어 현저히 구별되나, 이는 뇌물액수에 따른 법정형의 차이에 근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뇌물액수를 기준으로 유형화를 시도할 경우 연속적인 선고형 분포가 나타나게 되어 하나의 유형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수뢰후 부정처사

- 수뢰후 부정처사(또는 부정처사 후 수뢰)죄는 단순수뢰죄에 부정처사가 결합된 형태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단순수뢰죄와 유사한 선고형 분포를 보이고 있음
- 처단형에서 뚜렷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개의 범죄 유형으로 설정하지 않는 것이 양형기준의 단순성 요청에 부합함
- 모든 가중적 구성요건에 대하여 별개의 유형으로 기준 설정하는 것만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단순수뢰죄에서 ‘부정처사가 있는 경우’를 별개의 범죄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입법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특별가중인
자로 고려함

라. 뇌물범죄의 유형화 기준

(1) 개요

- 특별구성요건의 규정방식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뇌물금액에 따라 형벌을 가중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임
- 뇌물죄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에 따르더라도, 뇌물금액만큼 유의미한 다른 양형인자를 추출하기 어려움
- 따라서, 뇌물수수와 뇌물공여는 뇌물금액을 기준으로 유형화를 시도하는 것이 타당함
 - 외국의 입법례에도 부합하는 기준에 해당함

(2) 뇌물수수

- 뇌물금액과 형량의 상관관계 분석
 - 유의확률 : 0.000
 - 뇌물 액수가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2개월(1년)
 - 뇌물 액수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54개월(4년 6개월)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100만 원 이하	13	7.0769	2.10006	.58245
500만 원 이하	60	7.6667	2.55560	.32993
1천만 원 이하	47	11.6596	6.27374	.91512
5천만 원 이하	80	18.0875	10.71045	1.19746
1억 원 이하	10	46.2000	22.28004	7.04557
1억 원 초과	10	54.4000	21.70100	6.86246
합계	220	16.1500	15.15733	1.02191

- 구체적 유형화 방안
 - 원칙적으로 가중처벌되는 특별 구성요건상의 뇌물금액을 기준으

로 유형 분류를 하되, 추가로 ‘5억 원 이상’을 별도의 유형으로 설정함

	뇌물금액	법정형
제1유형	3천만 원 미만	5년 이하 징역
제2유형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5년 이상 징역
제3유형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7년 이상 징역
제4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제5유형	5억 원 이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3) 뇌물 공여

○ 뇌물금액과 형량의 상관관계 분석

- 유의확률 : 0.006
- 뇌물 액수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0개월
- 뇌물 액수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16개월(1년 4개월)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500만 원 이하	9	6.3333	2.73861	.91287
1천만 원 이하	5	12.4000	8.64870	3.86782
5천만 원 이하	14	10.0000	2.93520	.78446
1억 원 이하	3	12.6667	5.03322	2.90593
1억 원 초과	5	16.4000	5.54977	2.48193
합계	36	10.5278	5.37447	.89574

○ 구체적 유형화 방안

- 원칙적으로 뇌물수수와 같은 구간으로 유형 분류하되, 1억 원 이상구간에서 범죄발생빈도가 극히 적으므로 1억 원 이상은 하나의 유형으로 설정

	뇌물금액	법정형
제1유형	3천만 원 미만	5년 이하 징역
제2유형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5년 이하 징역
제3유형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5년 이하 징역
제4유형	1억 원 이상	5년 이하 징역

Ⅲ. 형량범위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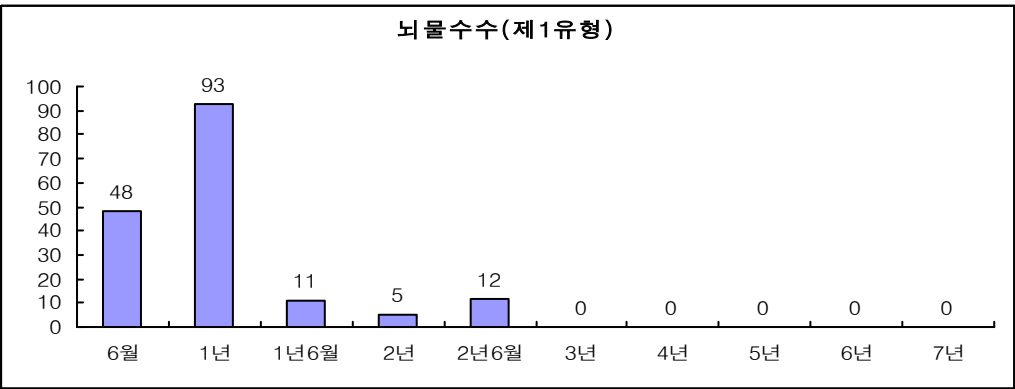
1. 유형별 형량범위

가. 뇌물수수¹⁷⁾

(1) 유형 분류에 따른 선고형 분포¹⁸⁾

구분		징역형량										전체
		6월	1년	1년 6월	2년	2년 6월	3년	4년	5년	6년	7년	
제1유형	수	48(45)	93(73)	11(3)	5(2)	12(8)	0	0	0	0	0	169(131)
	비율(%)	28.4 (34.4)	55.0 (55.7)	6.5 (2.3)	3.0 (1.5)	7.1 (6.1)	0.0	0.0	0.0	0.0	0.0	100.0 (77.51)
제2유형	수	0	0	1(1)	0	6	2	0	0	0	0	9(1)
	비율(%)	0.0	0.0	11.1 (100)	0.0	66.7	22.2	0.0	0.0	0.0	0.0	100.0 (11.1)
제3유형	수	0	0	1	1	0	0	3	3	0	0	8
	비율(%)	0.0	0.0	12.5	12.5	0.0	0.0	37.5	37.5	0.0	0.0	100.0
제4유형	수	0	0	0	0	1(1)	0	2	5	2	1	11(1)
	비율(%)	0.0	0.0	0.0	0.0	9.1 (100)	0.0	18.2	45.5	18.2	9.1	100.0 (11)
제5유형	수	0	0	0	0	0	0	0	0	0	1	1
	비율(%)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전체	수	48	93	13	6	19	2	5	8	2	2	198(133)
	비율(%)	24.2	47.0	6.6	3.0	9.6	1.0	2.5	4.0	1.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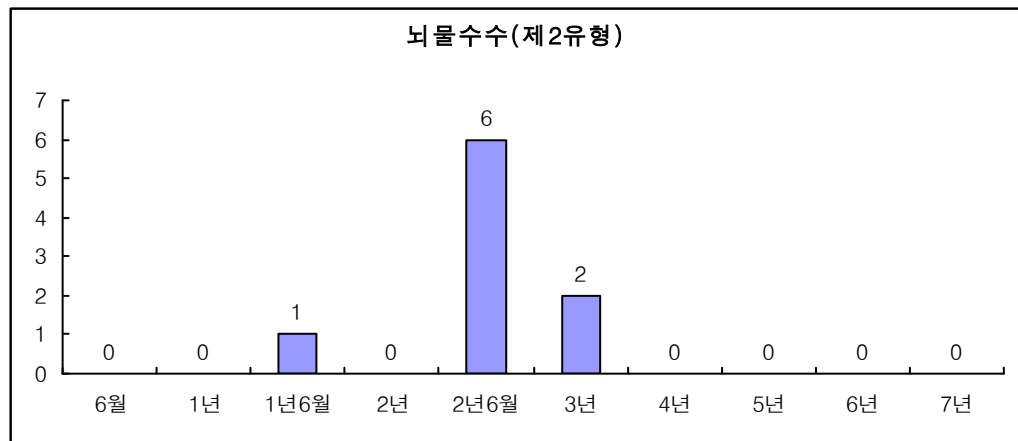
(가) 뇌물수수 (제1유형) : 3천만 원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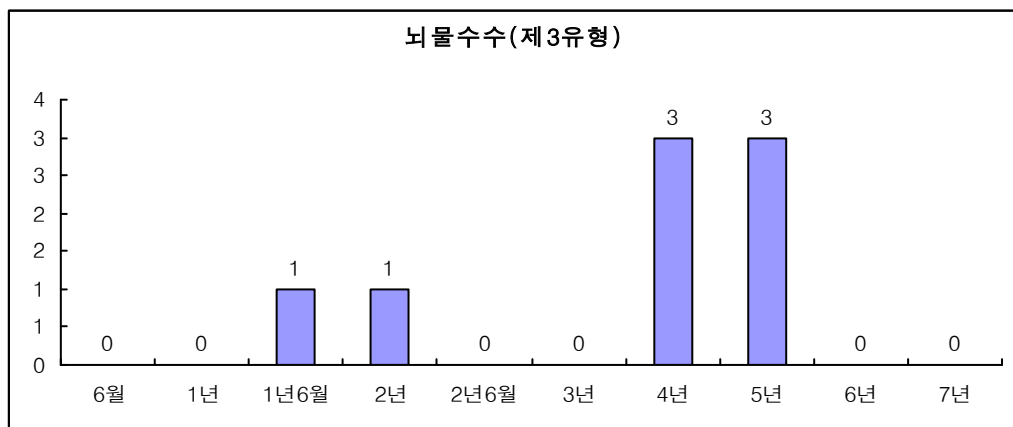
17) 분석대상 : 확정사건 및 추가 양형자료조사 결과 중 단일범(실행 및 집행유예 본형 포함)

18) ()안의 숫자는 집행유예 수 및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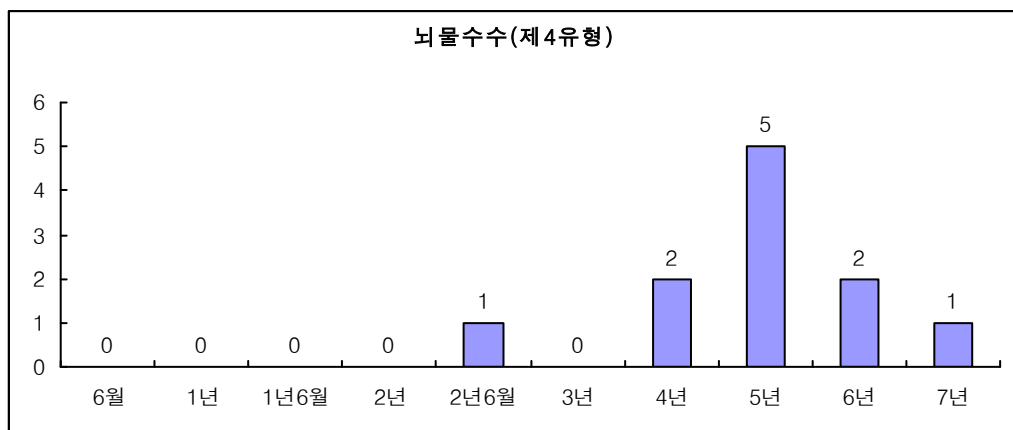
(나) 뇌물수수 (제2유형) :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¹⁹⁾



(다) 뇌물수수 (제3유형)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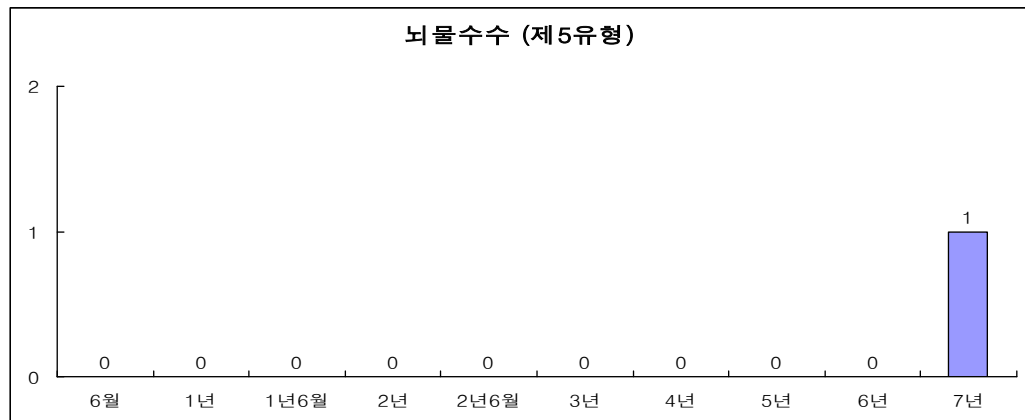
(라) 뇌물수수 (제4유형)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²¹⁾



19)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개정전과 동일

20) 법정형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개정전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마) 뇌물수수 (제5유형) : 5억 원 이상



(2) 경험적 접근방식에 따른 분석²²⁾

- 과거 선고형 중 약 70% ~ 80%에 해당하는 형량을 반영하는 방식을 취함

☞ 뇌물범죄의 경우 형량 폭이 다소 좁아 해당 유형에 속하는 범죄를 충분히 포섭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약 80%로 상향

- 약 80%의 형량을 포섭하는 경우 뇌물수수죄의 유형별 형량은 아래와 같음

유형	형량범위
제1유형	징역 6월 ~ 징역 2년
제2유형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제3유형	징역 1년 6월 ~ 징역 5년
제4유형	징역 2년 6월 ~ 징역 6년

- ▶ 제5유형은 해당 사건의 빈도 수가 적어 분석하기 어려움

21)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개정전과 동일

22) 손철우, 살인범죄 양형기준초안(I) 보고, 양형위원회 11차 회의자료, pp.14-15

나. 뇌물공여²³⁾

(1) 유형 분류에 따른 선고형 분포

▶ 전체

구분		징역형량							전체
		4월	6월	8월	10월	1년	1년 6월	2년	
제1유형	수	4(2)	4(3)	8(8)	3(3)	4(3)	2(1)	1(1)	26(21)
	비율(%)	15.4 (9.5)	15.4 (14.3)	30.8 (38.1)	11.5 (14.3)	15.4 (14.3)	7.7 (4.8)	3.8 (4.8)	100 (80.77)
제2유형	수	0	0	0	2(1)	0	0	0	2(1)
	비율(%)	0	0	0	100.0	0	0	0	100 (50)
제3유형	수	0	0	0	0	0	2(1)	0	2(1)
	비율(%)	0	0	0	0	0	100.0	0	100. (50)
제4유형	수	0	0	1(1)	1(1)	2(2)	2(2)	1	7(6) (85.71)
	비율(%)	0	0	14.3	14.3	28.6	28.6	14.3	100.0
전체	수	4	4	9	6	6	6	2	37
	비율(%)	10.8	10.8	24.3	16.2	16.2	16.2	5.4	100.0

▶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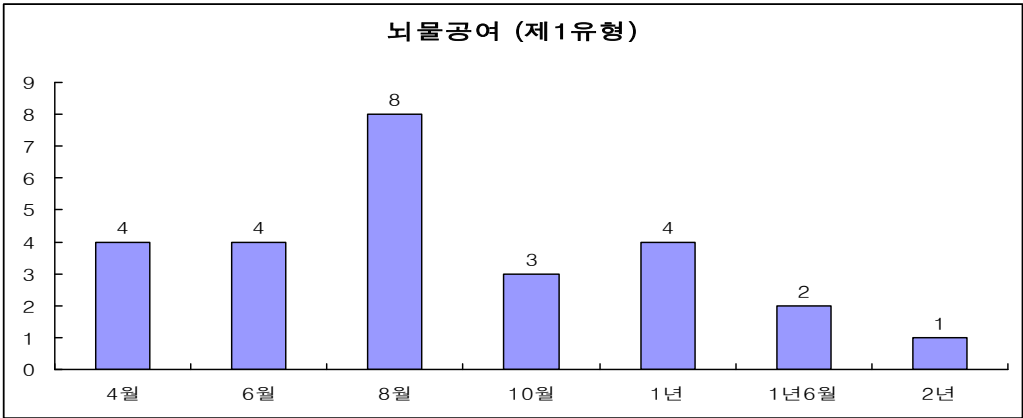
구분		징역형량						전체
		4월	6월	10월	1년	1년 6월	2년	
3천만원 미만	수	2	1	0	1	1	0	5
	비율(%)	40.0	20.0	0	20.0	20.0	0	100.0
5천만원 미만	수	0	0	1	0	0	0	1
	비율(%)	0	0	100.0	0	0	0	100.0
1억원 미만	수	0	0	0	0	1	0	1
	비율(%)	0	0	0	0	100.0	0	100.0
1억원 이상	수	0	0	0	0	0	1	1
	비율(%)	0	0	0	0	0	100.0	100.0
전체	수	2	1	1	1	2	1	8
	비율(%)	25.0	12.5	12.5	12.5	25.0	12.5	100.0

23) 분석대상 :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 결과 중 단일범 및 경합범(전체 조사건수 고려)
실행 및 집행유예의 본형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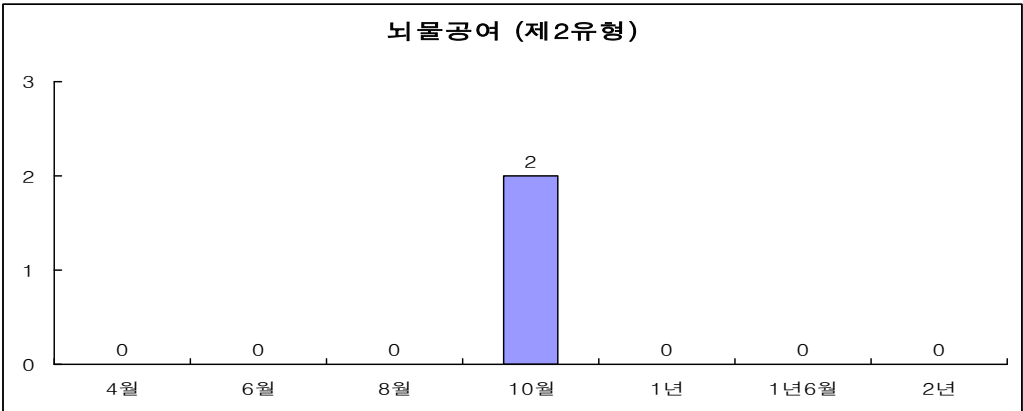
▶ 집행유예

구분		징역형량							전체
		4월	6년	8월	10월	1년	1년 6월	2년	
3천만원 미만	수	2	3	8	3	3	1	1	21
	비율(%)	9.5	14.3	38.1	14.3	14.3	4.8	4.8	100.0
5천만원 미만	수	0	0	0	1	0	0	0	1
	비율(%)	0	0	0	100.0	0	0	0	100.0
1억원 미만	수	0	0	0	0	0	1	0	1
	비율(%)	0	0	0	0	0	100.0	0	100.0
1억원 이상	수	0	0	1	1	2	2	0	6
	비율(%)	0	0	16.7	16.7	33.3	33.3	0	100.0
전체	수	2	3	9	5	5	4	1	29
	비율(%)	6.9	10.3	31.0	17.2	17.2	13.8	3.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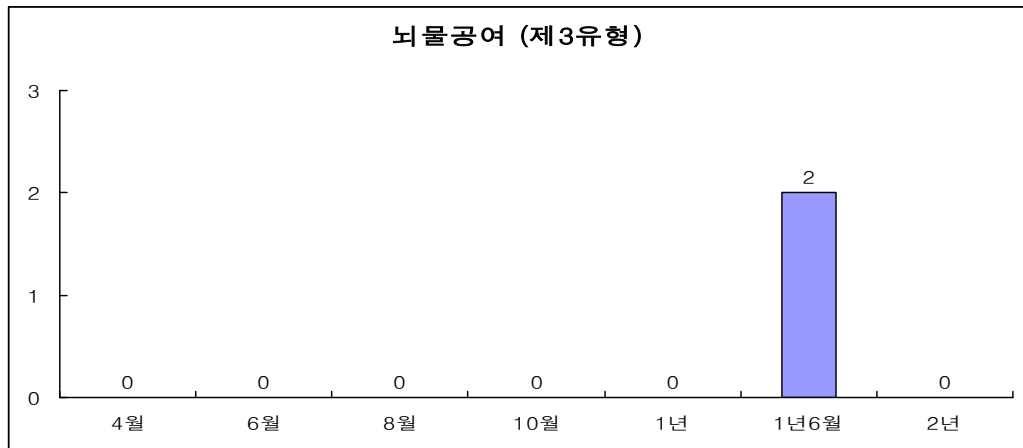
(가) 뇌물공여 (제1유형) : 3천만 원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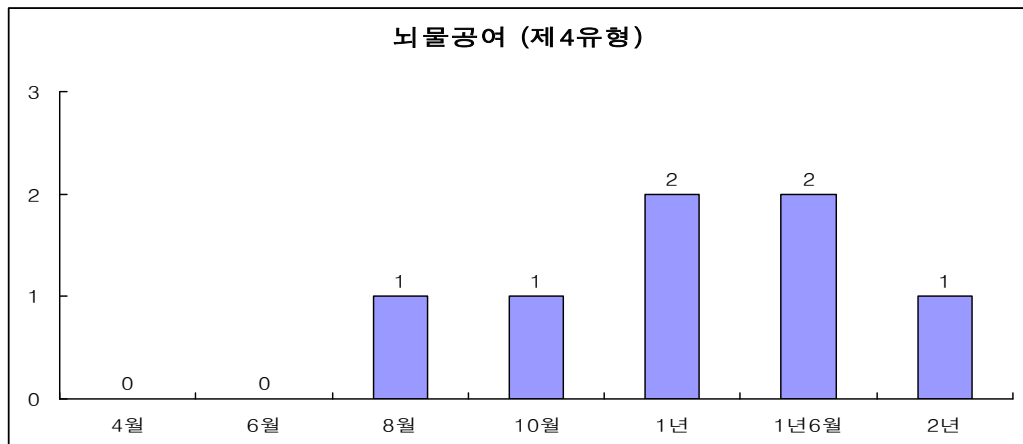
(나) 뇌물공여 (제2유형) :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다) 뇌물공여 (제3유형)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라) 뇌물공여 (제4유형) : 1억 원 이상



(마) 경험적 접근방식에 따른 분석

- 약 80%의 형량을 포섭하는 경우 뇌물공여죄의 유형별 형량은 아래와 같음

유형	형량범위
제1유형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제4유형	징역 8월 ~ 징역 2년

- ▶ 제2, 3유형은 해당 사건의 빈도 수가 적어 분석하기 어려움

2. 형량범위 설정 시 고려사항²⁴⁾

가. 규범적 조정

- 뇌물 등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²⁵⁾
 - 선고형이 법정형의 하한선에 편중되어 법정형과 선고형의 격차가 크다는 점은 대표적 지적 사항임
 - 양형위원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하여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가 나타났음²⁶⁾
- 반면, 뇌물죄에 대한 특별법상의 입법태도에 관하여 비판적인 입장도 제기되고 있음
 - 형법 제129조에서 제132조는 뇌물죄의 행위유형에 맞게 형벌을 세분화하고 있는데, 특별법은 이러한 구분을 무시하고 모든 뇌물유형을 동일하게 다루는 점, 형벌을 가중하더라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은 합리적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뇌물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경우 가액산정과정에서 자의가 개입될 소지가 많은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됨²⁷⁾
- 기술적 접근방법으로만 일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할 경우 과거의 양형실무를 그대로 반영하는 결과에 그치게 되어 양형실무를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뇌물범죄는 형량범위 설정에 있어 양형실무에 대한 규범적 조정이 필요한 대표적인 범죄에 해당함
 - 뇌물공여는 뇌물수수에 비하여 법정형이 낮기는 하나,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 형법상으로는 수뢰죄와 법정형이 동일하였던

24) 손철우, 살인범죄 양형기준초안(Ⅰ) 보고, 양형위원회 11차 회의자료, pp.16-17

25) 문형배, 위 논문, p.6

26) 양형기준 설정이 시급한 범죄에 대한 전문가 응답결과에서 1위로 나타났음(1순위 ~ 5순위를 합한 경우) ; 양형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요약보고, 양형위원회 제6차 회의자료, p.23

27) 오영근, 공무원범죄와 양형, 형사정책연구 제5권 제4호(1994), pp.122-123

점,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수뢰자와 증뢰자간의 비난가능성에는 수뢰자가 무겁다고 할 수 있으나, 일반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돈으로 공무원들을 유혹한 경우에는 그 비난가능성에 큰 차이가 없는 점, 뇌물공여의 동기 중 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15.3%)보다는 증뢰자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뇌물을 제공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한 증뢰자들의 심리적 태도가 뇌물근절을 어렵게 하는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²⁸⁾ 현재 특별법이 있음에도 수뢰죄에 대한 실무양형이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하한에 그치는 것은 증뢰자와의 처벌 형평성에도 한 원인이 있는 점²⁹⁾ 등을 감안하면 뇌물공여의 경우에도 현양형실무보다는 형을 높일 필요가 있음³⁰⁾

- 형량범위 설정 시 유형별로 적어도 법정형의 하한이 기본 형량범위에 포섭되도록 함으로써 가중처벌 규정을 둔 입법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함

나. 유형별 형량범위의 세분화

- 유형별 형량범위가 비교적 넓게 나타날 경우 처단형을 세분화하여 양형기준의 지침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형별 형량범위를 나눌 필요가 있음

28) 박주봉, 김용세, 뇌물에 관한 일반인식 조사연구, 법학연구 9권 1호(1998. 10.), p.223

29) 김종기, 뇌물에 관한 죄의 적정 양형을 저해하는 요인, p.294

30) 정용기·강석구, “형법상 증뢰죄의 본질과 대책”, 한국민간경비학회보 8호(2006. 9.), pp. 311-312, 320에 의하면, 우리나라 법체계 하에서 뇌물공여죄를 뇌물수수죄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가볍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뇌물공여죄의 본질을 비공무원이 단순히 수뢰자의 불법에 가담했다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공여자가 수뢰자의 불법을 유인 또는 조래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결과이다. 우리 사회가 앞에서는 뇌물근절을 주장하면서 뒤로는 뇌물 관행이 뿌리내린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설문조사 결과 공직자에 대한 선입견과는 달리 뇌물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공직자는 그다지 많지 않고 오히려 민원인이 투자 또는 보험적 성격의 목적으로 뇌물을 공여하고 있다는 점,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는 뇌물 공여자는 대부분 대기업이나 부유층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사회적 지위로 보아 공직자가 뇌물을 거절하기 힘든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뇌물수수자에게만 초점을 두는 뇌물죄 대책은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자발적인 뇌물공여자의 경우 원인제공자로서 가중처벌함으로써 뇌물죄가 뇌물수수자와 뇌물공여자의 공동책임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함

- 양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구간별 형량범위가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처단형을 세분함
-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의 각 유형별로 3단계 형량범위를 제시
 - 감경/기본/가중

다. 유형별 형량범위의 중첩

- 개별양형인자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살인죄 양형기준안과 같이 형량범위의 중첩을 허용

3. 형량범위(안)

가. 뇌물수수³¹⁾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6월 - 1년6월	1년 - 3년	1년6월 - 3년6월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년6월 - 6년	5년 - 7년	6년 - 8년
제4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5년 - 8년	7년 - 10년	9년 - 12년
제5유형 (5억 원 이상)	7년 - 10년	9년 - 12년	11년 이상, 무기

31) 탁희성, 김혜경, 뇌물죄의 양형시스템 구축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p. 95-97에 의하면, (1) 뇌물액이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고 5년의 형을 선고한다. (2) 뇌물액이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항의 형의 25%까지 가중한 범위(6년3월)내에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3) 뇌물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항의 형의 50%까지 가중한 범위(7년6월)내에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4) 뇌물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한다. 뇌물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관의 판단에 따라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를 원칙적으로 배제한다는 내용의 양형지침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유형 구분에 따른 형량 영역 표시]

구분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무기
1 유 형	감경																
	기본																
	가중																
2 유 형	감경																
	기본																
	가중																
3 유 형	감경																
	기본																
	가중																
4 유 형	감경																
	기본																
	가중																
5 유 형	감경																
	기본																
	가중																

나. 뇌물공여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 - 1년	10월 - 1년6월	1년 - 3년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년 - 2년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제4유형 (1억 원 이상)	2년 - 3년	2년6월 - 3년6월	3년 - 5년

[유형 구분에 따른 형량 영역 표시]

구분		0	1	2	3	4	5
1 유형	감경	■					
	기본	■	■				
	가중	■	■	■			
2 유형	감경		■				
	기본		■	■			
	가중		■	■	■		
3 유형	감경		■	■			
	기본		■	■	■		
	가중		■	■	■	■	
4 유형	감경			■	■		
	기본			■	■	■	
	가중			■	■	■	■

IV. 양형인자의 결정

1. 양형인자 추출(안)

가. 뇌물수수

(1) 법관설문조사결과³²⁾

- 1995년도 주요 지방법원 형사부 법관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뇌물죄에 관한 양형을 정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
 - 뇌물액수, 부당한 업무집행이 있었는지 여부, 뇌물수수경위(능동적, 수동적 등), 청탁 내용(불법성), 직무 내용, 전력, 형의 선고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직급, 공무원 근무기간 순

(2) 특별양형인자

○ 경험적 수치에 의한 특별양형인자

- 수뢰 관련 부정처사, 적극적 요구, 자수

○ 규범적 관점에 의한 특별양형인자

- 법률상 가중·감경사유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농아자, (심신미약),³³⁾ (누범)³⁴⁾
- 기타 :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공무원이 될 자인 경우, 내부비리 고발, 수사개시전 뇌물반환

(3) 일반양형인자

○ 경험적 수치에 의한 일반양형인자

- 업무 관련성 높음, (자백),³⁵⁾ 반성, 초범

32) 문형배, 위 논문 p.20

33) 공무원이 수뢰 당시 심신미약인 상태인 사건은 극히 적을 것임

34) 공무원이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도 상정하기 어려움

○ 규범적 관점에 의한 일반양형인자

- 소극가담, 특가법 4조의 준공무원, 뇌물사용용도가 개인용인 경우, 3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동종 전과 및) 징계 전력, 3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정부관리기업 간부직원)

○ 기타 고려해 볼 수 있는 일반양형인자

- 뇌물수수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것이 체계적·구조적·지속적인 비리의 편린이라고 보이는 경우(부패의 만연 정도가 심한 조직에서의 수뢰)³⁵⁾

나. 뇌물공여

(1) 특별양형인자

○ 경험적 수치에 의한 특별양형인자

- 증뢰 관련 부정처사의 요구(적극적 증뢰),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규범적 관점에 의한 특별양형인자

- 법률상 가중·감경 사유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농아자, (심신미약), 자수, 동종 누범
- 기타 :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증뢰

(2) 일반양형인자

○ 경험적 수치에 의한 일반양형인자

- 업무 관련성 높음

35) 자백과 반성을 모두 양형인자로 하면 이중 평가의 위험 있으므로 자기부죄금지원칙을 고려하여 자백을 양형인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함

36) 문형배, 위 논문, p.20에서는 부패의 만연 정도가 심한 조직 내에서 이루어진 부정부패사범에 대하여는 더욱 엄정한 양형을 선고함으로써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함
탁희성, 위 논문 p.96에서는 수뢰자가 세금, 병역, 환경, 보건, 사법 등의 분야에 있어서 국가의 주요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형을 가중해야 한다고 주장함

○ 규범적 관점에 의한 일반양형인자

- 증뢰물 전달, 소극가담,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 (자백), 반성, 초범, 이중 누범 및 동종 전과

○ 기타 고려해 볼 수 있는 일반양형인자

- 장기간의 증뢰, 증뢰로 인한 이익의 실현, 행위가 대규모 이익과 관련된 경우³⁷⁾

37) 독일 형법 제335조 제2항 제1호

2. 양형인자 정리

가. 뇌물수수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요구, 약속에 그친 경우 공무원이 될 자인 경우	수뢰 관련 부정처사,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적극적 요구
	행위자	농아자, (심신미약), 내부 비리고발 또는 자수, 수사개시전 뇌물반환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소극가담, 특가법 4조의 준공무원	일부 경합범, 업무 관련성 높음, 뇌물사용용도가 개 인용인 경우, 3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행위자	(자백), 반성, 초범	(동종 전과 및) 징계 전 력,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나. 뇌물공여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수뢰자의 적 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증뢰	증뢰 관련 부정처사의 요구(적극적 증뢰), 피지 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농아자, (심신미약), 자수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증뢰물 전달, 소극가담, 특가법 4조의 준공무원 에 대한 증뢰	일부 경합범, 업무 관련성 높음
	행위자	(자백), 반성, 초범	이종 누범 및 동종 전과

V. 집행유예 기준

1. 개요

- 각종 양형인자와 징역형의 집행 여부 사이에 교차분석, 상관분석 등을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형법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유예 결정 시 참작할 사유를 아래와 같이 추출함

2. 집행유예 참작사유 추출(안)

가. 뇌물수수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요구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 수수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참작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징계전력 ○ 장기간의 뇌물수수 ○ 3급 이상 고위공무원 ○ 수뢰 후 부정처사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뇌물사용 용도가 개인 용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범 ○ 수사개시전 뇌물반환 ○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 장기간 근무(20년 이상) ○ 피고인 중병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고려되어서는 안 되는 요소 :

- ① 신분상실 또는 사회적 명예 실추
- ② 부정한 이익의 몰수
- ③ 본건 관련 징계처분

나. 뇌물공여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 ○ 적극적 증뢰 ○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 청탁내용이 부정한 업무집행을 목적으로 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소극가담(상사의 지시 등) ○ 수뢰자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장기간의 뇌물공여 ○ 3급 이상 고위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 대규모 이익과 관련한 뇌물공여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범 ○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 중병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참고자료 ◆³⁸⁾

- 뇌물액수 : 100만 원 미만일 경우 집행유예율이 92.3%인데 반해 1억 원 이상이 되면 집행유예율이 39%로 낮아짐³⁹⁾
- 뇌물수수횟수 : 횟수가 많을수록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아짐
 - 1회일 경우 집행유예율 : 84.1%
 - 31회 이상일 경우 집행유예율 : 69.6%
- 뇌물수수경위 : 수뢰자의 부패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판단기준
 - 증뢰자가 제공한 뇌물을 소극적으로 수수한 경우 집행유예율 : 88.2%
 - 수뢰자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집행유예율 : 76.7%

- 청탁내용 및 부정처사 여부 : 비난가능성이 커짐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실행선고율 : 15.9%
 - 청탁내용이 적법한 업무내용의 보장과 관련된 것인 경우 실행선고율 : 8.1%
- 수뢰자의 직급 : 높을수록 국가의 공정성과 국가업무에 대한 불신을 키움
 - 수뢰자가 하위직 공무원인 경우 집행유예율 : 86.4%
 - 수뢰자가 고위직 공무원인 경우 집행유예율 : 72.2%
 - 수뢰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인 경우 집행유예율 : 43.5%
- 뇌물의 반환여부 : 피고인의 회오를 추정할 수 있고 뇌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
 - 반환 여부에 따른 집행유예 비율 분석 필요
- 자백 여부 : 개전의 정을 추정할 수 있음
 -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실행선고율이 자백을 한 경우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38) 탁희성, 김혜경, 위 논문 pp.69-75 참조(분석대상 : 2001년~2003년 사건)

Ⅵ. 뇌물범죄 양형기준안

[적용범위]

뇌물범죄의 양형기준은 수뢰죄(형법 제129조), 수뢰후 부정처사죄, 사후수뢰죄(형법 제131조), 특가법상 수뢰죄(특가법 제2조 제1항) 및 뇌물공여죄(형법 제133조 제1항)를 저지른 성인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뇌물수수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6월 - 1년6월	1년 - 3년	1년6월 - 3년6월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년6월 - 6년	5년 - 7년	6년 - 8년
제4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5년 - 8년	7년 - 10년	9년 - 12년
제5유형 (5억 원 이상)	7년 - 10년	9년 - 12년	11년 이상, 무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요구, 약속에 그친 경우 공무원이 될 자인 경우	수뢰 관련 부정처사,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적극적 요구
	행위자	농아자, (심신미약), 내부 비리고발 또는 자수, 수사개시전 뇌물반환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소극가담, 특가법 4조의 준공무원	일부 경합범, 업무 관련성 높음, 뇌물사용용도가 개 인용인 경우, 3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행위자	(자백), 반성, 초범	(동종 전과 및) 징계 전 력, 국장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2. 뇌물공여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 - 1년	10월 - 1년6월	1년 - 3년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년 - 2년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제4유형 (1억 원 이상)	2년 - 3년	2년6월 - 3년6월	3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수뢰자의 적 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증뢰	증뢰 관련 부정처사의 요구(적극적 증뢰), 피지 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농아자, (심신미약), 자수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증뢰물 전달, 소극가담, 특가법 4조의 준공무원 에 대한 증뢰	일부 경합범, 업무 관련성 높음
	행위자	(자백), 반성, 초범	이종 누범 및 동종 전과

[공통 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이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처단형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상한을 1/2까지 가중한 결과 처단형 범위가 15년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도 있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이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처단형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에 의한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한 처단형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양형인자의 정의]

1. 뇌물 수수

가. 적극적 요구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함
 - 증뢰자에게 뇌물을 공여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
 - 증뢰자에게 뇌물을 공여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 행사를 통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 등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가할 것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나. 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뇌물을 증뢰자에게 직접 반환한 경우를 말함
- 다만, 뇌물 반환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는 제외

다. 내부비리 고발

-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 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말함

라. 업무 관련성 높음

- 피고인이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함
 - 반드시 직급에만 상응하는 것은 아니므로 하위 직급인 경우에도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

마. 뇌물사용용도가 개인용인 경우

- 피고인이 유홍비나 재산증식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경우를 말함

2. 뇌물공여

가.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수뢰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한 경우를 말함

나. 증뢰 관련 부정처사의 요구(적극적 증뢰)

- 수뢰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면서 직무에 관해 부정한 행위를 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업무 관련성 높음

- 청탁 내용에 관해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뢰자를 대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를 말함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 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 범위는 특별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 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적 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적/기타 인자보다 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적 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적/기타 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 범위에서,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에서,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 범위에서 선고형을 정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 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집행유예 기준]

1. 뇌물수수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요구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 수수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참작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징계전력 ○ 장기간의 뇌물수수 ○ 3급 이상 고위공무원 ○ 수뢰 후 부정처사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뇌물사용 용도가 개인 용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범 ○ 수사개시전 뇌물반환 ○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 장기간 근무(20년 이상) ○ 피고인 중병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고려되어서는 안 되는 요소 :

- ① 신분상실 또는 사회적 명예 실추
- ② 부정한 이익의 몰수
- ③ 본건 관련 징계처분

2. 뇌물공여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 ○ 적극적 증뢰 ○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 청탁내용이 부정한 업무집행을 목적으로 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소극가담(상사의 지시 등) ○ 수뢰자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장기간의 뇌물공여 ○ 3급 이상 고위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 대규모 이익과 관련한 뇌물공여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범 ○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 받은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 중병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복수 집행유예 결정인자의 평가 원칙]

- ①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사유는 일반 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② 주요 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사유가 주요 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③ 주요 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사유가 주요 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④ 위 ② 또는 ③에 해당하나 일반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이거나, 위 ② 또는 ③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